IMPACT CONNECTOR · WEEKLY INTELLIGENCE BRIEFING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5

공개하라던 나라가 행동하라고 말을 바꿨다 — 매출 3억 5,000만 파운드 넘는 기업에 인권실사를 지우는 영국, 수입 차단을 두 배로 늘린 미국 세관, 인권을 경영진 재선임 기준에 넣은 일본 운용사 5

평가하는 쪽에는 면허를, 주장하는 쪽에는 유예를 — 영국의 ESG 평가기관 인가제, 유럽연합이 3년 만에 거둬들인 그린 주장 지침, 의무와 자율 사이를 오간 브라질·태국의 공시 7

임팩트를 출자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묻다 — 빌려주기 전에 대출자 2,000여 명에게 전화한 신용 투자자, 조사비를 반씩 낸 벤처 투자자, 양허한 수익을 보조금 가치로 환산하는 '임팩트 우선' 투자자들 10

선거가 끝나자 ESG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 갔다 — 중간선거에서 진 반ESG 후보들, 의결권 자문을 겨눈 켄터키 법에 소송을 낸 종교계 투자자들, 기후 위험 점수를 '기만'이라 고소한 플로리다 13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15

회복력은 보도자료로 생기지 않는다 — 필요액의 10분의 1에 그친 적응 재원, 등산로 21마일이 가게 24곳을 부른 노스캐롤라이나, 2년 만에 첫 마감을 넘긴 중남미 기후 회복력 펀드 15

자연에 매긴 값과 실제로 들어온 돈 — 65개국이 지지하고 8개국이 돈을 낸 열대우림 기금, 금액을 적지 않은 예레반 경로, 연 9억 9,300만 달러가 모자란 필리핀 18

공공의 장바구니가 사회적 가치를 고르는 방법 — 일자리와 기술로 좁혀진 영국의 사회적 가치 지침, 8년 만에 처음 내려간 네덜란드 지속가능 조달 점수, '문제를 정하는 자리'를 묻는 이탈리아 20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22

녹색 꼬리표가 붙은 돈의 장부 — 시중은행 최대 3,000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 녹색 증권에 올라탄 중소기업 3곳, 그리고 '1년 만에 세 배'가 된 배출권 가격 22

숫자로 적게 하는 지배구조 — 코스피 826곳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여성 임원 20.4%에 멈춘 공공기관 345곳 25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7

05 이번 호 전망 29

06 지난 전망 점검 29

07 편집장의 글 29

① 성명서의 시대가 끝나는 방식 29

② 누구에게 묻느냐가 답을 정한다 30

③ 재정이 빠듯해질 때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가 30

THIS WEEK POINT

공개하라던 규칙이 행동하라는 규칙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 정부는 4일 연매출 3억 5,000만 파운드가 넘는 기업에 공급망 인권실사를 의무로 지우고,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시장에서 거둬들이게 할 규제기관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현대노예법이 요구한 것은 연례 성명서였다. 미국 세관은 2026 회계연도에 강제노동 의심 상품 3억 2,500만 달러어치를 멈춰 세웠고, 일본 최대 운용사 가운데 한 곳은 인권 위험 관리를 경영진 재선임 판단 기준에 넣었다. 성명서를 쓰는 일과 공급망을 바꾸는 일 사이의 거리가 법과 돈으로 좁혀지는 주였다.

평가하는 쪽에는 면허를, 주장하는 쪽에는 유예를 줬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ESG 평가기관을 처음으로 인가제 아래 두고, 해외 평가기관 20곳 안팎이 영국 내 사업 기반을 새로 갖춰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년 넘게 표류한 '그린 주장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브라질은 반년 만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다시 의무로 할지 묻기 시작했고, 태국은 상장사 의무공시 일정을 확정했다. 누구의 숫자를 믿을지에 대한 규칙이 나라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임팩트의 증거를 고객에게 묻는 투자자가 늘었다. 신흥국 핀테크에 돈을 대는 미국 신용 투자자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대출자 2,0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답을 근거로 추심업체를 끊게 하고 숨은 수수료를 없애라는 조건을 달았다. 시장 수익률을 내려놓은 '임팩트 우선' 투자자들은 양허한 수익을 보조금 가치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기업 기금 공모에 지원한 사회문제 해결 조직 213곳 가운데 지원 전후를 비교한 측정값을 낸 곳이 12곳이었다.

> 🔒
>
> ###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약속을 검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시 정해지고 있다
>
>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주 꼭지들은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던진다. 기업의 인권 약속은 누가 확인하는가(영국은 규제기관이라고 답했다), ESG 점수는 누가 감독하는가(영국 금융감독청이라고 답했다), 녹색 주장은 누가 검증하는가(유럽연합은 이번에는 답하지 않기로 했다), 임팩트 투자의 성과는 누가 판정하는가(일부 투자자는 고객이라고 답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성의 언어는 기업이 스스로 쓰고 스스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랐다. 이번 주의 결정들은 그 검증 권한이 규제기관, 감독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로

나뉘어 옮겨 가는 장면이다. 한국에서도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과 2028년 첫 지속가능성 의무공시를 앞두고 같은 질문이 하위 규정의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검증을 미리 받아들인 조직이다. 공급망 실사를 이미 해 온 유통 대기업, 평가 방법론을 공개해 온 평가기관, 고객 조사를 투자계약서에 넣은 신용 투자자는 새 규칙이 와도 고칠 것이 적다. 불리해지는 쪽은 자기 보고에 기대 온 조직이다. 성명서만 내 온 기업, 방법론을 영업 비밀로 다뤄 온 평가기관, 출자자에게만 성과를 보고해 온 운용사는 다른 누군가가 자기 숫자를 확인하는 상황을 처음 맞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조직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검증의 주체를 스스로 늘려 두는 것이다. 수출 기업은 영국·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기준(영국 매출 3억 5,000만 파운드, 유럽연합 강제노동 규칙 2027년 12월)을 기준으로 실사 대상을 먼저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임팩트 투자자는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전에, 성과를 출자자 보고서만이 아니라 수혜자 조사로 확인하는 절차를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 공공 지원의 성과 기준이 하위 규정으로 정해지기 전에 스스로 확인 절차를 가진 조직이 그 기준을 설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검증 권한이 옮겨 간다고 해서 검증 비용까지 공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인권실사법은 대기업만 겨냥했지만 실사 요구는 결국 협력사로 내려가고, 평가기관 인가 비용은 평가 수수료에 얹힌다. 운영비 지원이 사업비의 5분의 1에 그치는 한국 비영리 현장에서 측정 요구만 늘면, 측정할 여력이 있는 큰 조직만 '검증된 조직'이 된다. 검증을 늘리는 설계와 그 비용을 나누는 설계는 같이 가야 한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공개하라던 나라가 행동하라고 말을 바꿨다 — 매출 3억 5,000만 파운드 넘는 기업에 인권실사를 지우는 영국, 수입 차단을 두 배로 늘린 미국 세관, 인권을 경영진 재선임 기준에 넣은 일본 운용사

2주 전 이 지면은 영국 유통 대기업들이 정부에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로 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소식을 '기업이 먼저 규제를 요구했다'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번 주 영국 정부가 그 요구에 답했다. 영국 산업통상부는 4일 '책임 있는 기업 행동'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조너선 레이놀즈 장관이 새 인권실사 의무화 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3억 5,000만 파운드(약 4억 7,000만 달러)가 넘는 영국 기업과, 영국에서 올린 매출이 같은 기준을 넘는 해외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자기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위험을 찾아내고,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지침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맞춘다고 했다.

새 법의 핵심은 집행 권한이다. 규제기관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드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기업을 조사하고, 실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그 상품을 시장에서 거둬들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레이놀즈 장관은 검토 결과 영국의 강제노동 방지 체계가 "파편화돼 있고 자발적 조치와 보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일본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는 이 변화를 정확히 짚었다.

영국은 2015년 현대노예법 54조로 연매출 3,600만 파운드 이상 기업에 노예노동·인신매매 대응 조치를 담은 성명서를 해마다 내도록 했지만, 인권실사는 그 성명서에 담을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을 뿐 의무가 아니었다. 이번 방침은 공시를 축으로 한 법에서 규제기관의 집행 권한을 갖춘 행동 의무로 옮겨 가는 것이다. 북아일랜드에는 유럽연합 강제노동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고, 입법 시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무역도 등을 떠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해 초 영국을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교역 상대국으로 꼽았고, 이후 영국산 수입품에 새 관세가 붙었다. 영국 정부는 검토가 관세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했지만, 발표문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 규칙을 맞출 필요를 강조했다. 미국의 집행 강도는 숫자로 드러난다.

공급망 노동 착취를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트랜스페어런템이 영국 책임투자 전문 매체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2026 회계연도에 수입 금지 조치를 전년의 두 배로 늘렸고, 강제노동 의심 상품 3억 2,500만 달러어치를 멈춰 세웠다. 전년(1억 6,400만 달러)의 거의 두 배다.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규칙은 2027년 12월부터 강제노동으로 만든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 피해자를 2,800만 명으로 추산한다.

투자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노무라홀딩스 산하 노무라자산운용은 2일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고쳐, TOPIX100 구성 기업 최고경영자의 재선임을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지속가능성 과제에 인권과 디지털 사회의 위험 관리를 추가했다. 같은 개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은 기업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기준도 엄격하게 했다. 인권 대응이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가 감독해야 할 경영 위험으로 분류된 것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4개국 6개 매체가 「human rights due diligence·forced labour」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에는 거의 없던 이야기가 새로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건이다. 영국 법안의 적용 기준과 집행 권한은 국제 ESG 매체와 일본 지속가능성 매체 본문에서, 미국 세관 집행 수치는 영국 책임투자 매체 기고문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확인된 근거 없음 — 영국에서 연매출 3억 5,000만 파운드를 넘기는 한국 기업이 몇 곳이고 그 공급망이 어느 나라에 걸쳐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법이 국내 기업과 협력사에 미칠 영향의 크기를 셀 수 있다. 국내 매체에서 이번 발표의 국내 파급을 다룬 기사는 이번 주 찾지 못했다. 다만 영국 법이 겨냥하는 것은 대기업이고, 실사 요구는 계약을 따라 협력사로 내려간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에 납품하는 국내 부품·소재 기업이라면 원청이 요구하기 전에 자기 사업장의 근로시간·채용 수수료·이주노동자 고용 조건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싼 대비다. 2027년 12월 유럽연합 강제노동 규칙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한 회계연도 남짓이다.

🔒

심층 — 공시의 시대에서 집행의 시대로 (영국 책임 있는 기업 행동 검토 · 미국 세관 집행 실적 · 노무라자산운용 의결권 기준)

왜 지금 중요한가. 지난 10년 동안 공급망 인권 규제의 주류는 '공개하라'였다. 영국 현대노예법, 호주 현대노예법,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이 모두 그랬다. 성명서는 쌓였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번 영국 방침은 그 모델을 만든 나라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 권한을 갖춘 행동 의무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동시에 미국은 수입 차단으로, 유럽연합은 판매 금지로 같은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세 시장이 서로 다른 도구로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공급망을 가진 기업이 피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상 없어진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이미 실사를 해 온 기업이다. 2주 전 전한 것처럼 영국 유통 대기업들이 의무화를 먼저 요구한 이유는, 실사 비용을 이미 치르고 있는 기업과 치르지 않는 경쟁사 사이의 비용 차이를 법으로 없애기 위해서였다. 불리해지는 쪽은 복잡한 공급망과 형식적인 감사, 행동 강령 뒤에 서 있던 기업이다. 트랜스페어런템은 기고문에

서 투자자가 강제노동 문제를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고 썼다. 미국 세관의 조치는 공급망 차질과 함께, 숨어 있던 채용 수수료를 노동자에게 수백만 달러씩 갑자기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확인된 근거 없음 — 국내 기업의 영국·유럽연합 매출 규모와 공급망 국가 분포를 확인하면 대상 기업을 특정할 수 있다. 방법의 순서는 분명하다. 먼저 자사 매출 기준으로 어느 법의 직접 대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주요 고객사가 어느 법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고객사가 대상이면 계약서에 실사 조항이 들어온다. 그다음이 고위험 품목(원자재·섬유·전자부품)과 고위험 고용 형태(이주노동자·하청 인력)의 지도다.

놓치기 쉬운 함정. 실사 의무가 강해지면 기업이 가장 쉽게 택하는 대응은 위험한 공급처와 거래를 끊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를 끊으면 그곳의 노동자는 더 나쁜 일자리로 밀려날 수 있고, 기업은 개선할 지렛대를 잃는다. 유엔 이행원칙과 OECD 지침이 '구제'와 '영향력 행사'를 실사의 일부로 두는 이유다. 철수보다 개선 계획을 우선하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규제기관 앞에서도 더 설득력이 있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1) — UK to Introduce Mandatory Supply Chain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1) — 【イギリス】政府、売上700億円超企業に人権デューデリ義務化へ。日本企業にも影響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11) — Comment: Investors' plausible deniability on forced labour is over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1) — 【日本】野村AM、議決権行使基準改定。人権・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と資本効率で要件強化

평가하는 쪽에는 면허를, 주장하는 쪽에는 유예를 — 영국의 ESG 평가기관 인가제, 유럽연합이 3년 만에 거둬들인 그린 주장 지침, 의무와 자율 사이를 오간 브라질·태국의 공시

3주 전 이 지면은 'ESG 점수가 투자 판단 정보원 1위에서 7위로 내려간' 흐름을 '평가자를 평가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번 주 영국이 그 평가자에게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3일 ESG 평가기관을 감독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ESG 평가기관이 영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2028년 6월 29일부터 영국에서 ESG 평가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신청은 2027년 6월 24일부터 받는다. 향후 1년 예상 매출이 50만 파운드(약 9억 원) 이상인 기관은 7월 29일까지, 그보다 작은 기관은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가 없이 영업하면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범위가 넓다. 영국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평가기관도 영국 고객에게 유료 평가정보를 팔면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중개업체를 거쳐 영국 고객에게 전달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무료로 공개하는 등급은 제외된다. 국내 ESG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FCA

는 최종 정책문서에서 해외 평가기관 20곳이 영국 내 사업 기반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형 3곳, 중형 5곳, 소형 12곳이다.

규칙의 내용은 투명성과 이해상충 관리다. 평가기관은 주요 지표·평가방법·데이터 출처를 공개하고, 자료가 없어 추정치를 썼다면 그 방식도 설명해야 한다. 같은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경우 정보 차단과 조직 분리로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에 처음 등급을 줄 때는 최소 2영업일 전에 알려야 하고, 기업은 기초 데이터를 요청해 사실 오류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7월부터 이미 ESG 평가기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주 유럽연합은 반대 방향의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일 2027년 작업계획을 내놓으며 '그린 주장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2023년 3월 제안된 이 지침은 기업의 환경 주장을 독립 검증과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하게 하고, 사설 환경 라벨의 난립을 막는 것이 목표였다. 제안 당시 집행위는 유럽연합 내 기업 환경 주장의 절반 이상이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40%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각료이사회는 2024년 6월 협상 지침에 합의하지 못했고, 2025년 6월 유럽의회 최대 정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뒤 사실상 멈췄다. 집행위는 "공동입법자 앞에 3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고 철회 사유를 적었다. 일본 지속가능성 매체에 따르면 이번 작업계획은 새 정책 23건을 내놓는 대신 계류 법안 18건을 철회하고 기존 법령 14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3주 전 이 지면이 다룬 '그린워싱 지침', 곧 소비자의 녹색 전환 권한 강화 지침은 이미 시행 중이라 남는다.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는 금지하되, 주장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는 만들지 않기로 한 셈이다.

신흥국 공시는 의무와 자율 사이를 오갔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상장사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공시를 의무에서 '공시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라'로 바꾼 지 반년 만에, 의무와 자율의 장단점을 다시 묻는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투자·회계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반대로 ISSB 기준 의무공시를 확정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사가 2028년(2027년 정보)부터 시작하고, 상위 100개사는 2029년,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 신시장 상장사와 리츠 등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따른다. 온실가스 배출 공시는 국제 기준에 따른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6개국 7개 매체가 「ESG ratings·평가기관」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12.7배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건이다. FCA 규칙의 일정과 해외 기관 추산은 국내 ESG 매체 본문에서, 그린 주장 지침 철회와 브라질·태국 공시는 국제 ESG 매체 본문에서, 작업계획 규모는 일본 지속가능성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국내에서는 한국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한국ESG연구소 등이 ESG 평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ESG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자사 평가정보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상장기업 투자 판단에 쓰인다고 설명하고, 서스틴베스트는

해외 기관투자자용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평가정보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영국 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영국 소재 고객에게 유료로 공급하는지가 기준이고, 국내 기관의 영국 고객 보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평가기관이라면 2027년 6월 24일 신청 개시 전에 방법론 공개 범위와 컨설팅 부문 분리 계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심층 — 숫자를 만드는 쪽과 말을 만드는 쪽에 다른 잣대 (FCA ESG 평가기관 최종 규칙 · 유럽연합 2027년 작업계획 · 브라질·태국 공시 결정)

왜 지금 중요한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기업이 스스로 하는 주장(친환경 제품, 탄소중립),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매기는 점수(ESG 등급)다. 이번 주 영국은 점수를 매기는 쪽에 인가와 감독을 들이댔고, 유럽연합은 주장하는 쪽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접었다. 두 결정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같은 계산에서 나온다. 규제 비용을 소수의 전문 기관(평가기관)에 지우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수많은 기업에 지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했다. 앞으로 지속가능성 규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할 때 이 비용 배분의 논리가 가장 좋은 예측 도구가 될 수 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방법론을 이미 공개해 온 평가기관, 그리고 영국 시장에 지점을 둔 대형 평가기관이다. 인가와 현지 인력을 갖출 여력이 있는 곳이 시장을 지키고, 소형 12곳으로 추산된 해외 기관은 철수와 투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평가받는 기업은 처음으로 등급 산정 전에 통지를 받고 기초 데이터에 이의를 낼 수 있게 돼 협상력이 생긴다. 불리해지는 쪽은 녹색 주장을 근거 없이 써 온 기업을 경쟁자로 둔 정직한 기업이다. 사전 검증 체계가 사라지면서 정직한 주장과 모호한 주장을 구별하는 일은 다시 소비자 단체의 고발과 법원의 사후 판단에 맡겨진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상장사는 해외 평가기관의 등급을 받고 있고, 영국 규칙이 시행되는 2028년 6월부터는 그 기관들이 등급 산정 전에 기업에 통지하고 기초 데이터를 요청받으면 제공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담당 부서는 지금부터 주요 평가기관별로 쓰는 데이터와 그 출처를 정리해 두면, 통지가 왔을 때 사실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바로 쓸 수 있다. 녹색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유럽연합이 사전 검증을 접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소비자 지침 아래에서 주장 하나하나의 근거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놓치기 쉬운 함정. 영국 규칙을 'ESG 평가가 믿을 만해졌다'로 읽으면 안 된다. 규칙은 평가 방법을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게 할 뿐, 평가 방법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기업을 두고 평가기관마다 다른 등급을 주는 상관관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브라질 사례도 경계할 대목이다. 의무를 완화했다가 반년 만에 되돌리는 정책 변동은 기업이 공시 체계에 투자할 동기를 가장 크게 떨어뜨린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1) — 영국, 해외 ESG 평가기관도 인가 의무화…20곳 영향 예상 · ESG Today (국제, 2026-11) — EU Commission Scraps Green Claims Directive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1) — 【EU】欧州委、2027年作業計画発表。グリーンクレーム指令案撤回や自然保護法制見直し等 · ESG Today (국제, 2026-11) — Brazil Reconsiders Mandatory Sustainability Reporting Just Months After Switch to Voluntary · ESG Today (국제, 2026-11) — Thailand Launches Mandatory ISSB-Aligned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Public Companies

임팩트를 출자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묻다 — 빌려주기 전에 대출자 2,000여 명에게 전화한 신용 투자자, 조사비를 반씩 낸 벤처 투자자, 양허한 수익을 보조금 가치로 환산하는 '임팩트 우선' 투자자들

4주 전 이 지면은 '측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투자자를 위해 만든 임팩트 측정이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정책 밖으로 밀어낸 캄보디아 소액금융 사례를 전했다. 이번 주 미국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에는 그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은 투자자 세 곳의 연재가 실렸다. 고객 조사 전문 기업 60 디시벨스와 함께 일하는 신용 투자자 식스포인트캐피털, 벤처 투자자 쿠오나캐피털과 액시온벤처스가 고객의 목소리를 투자 결정의 어느 단계에 넣는지를 각각 공개했다.

가장 직접적인 곳은 식스포인트다. 신흥국 핀테크 대출 플랫폼에 메자닌 등 후순위 자금을 대는 이 운용사는 멕시코·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나이지리아·케냐·인도네시아의 플랫폼 7곳에 투자했고, 그 대출은 100만 명 이상과 소기업 200곳 이상에게 닿았다. 식스포인트는 투자 전 실사에서 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다. 연체자와 채무불이행자, 한 번만 빌린 사람을 일부러 많이 표본에 넣는다. 지금까지 인터뷰는 투자를 거절한 플랫폼까지 포함해 2,000건이 넘는다. 결과는 계약 조건이 된다. 2024년 멕시코에서 375명을 조사하자 위협적인 추심 전화가 한 외주 추심업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식스포인트는 플랫폼에 그 업체와의 계약을 끊게 했다.

2025년 말 플랫폼이 그 업체를 다시 쓰겠다고 하자 거절했다. 올해 멕시코의 한 신용카드 대출사는 고객 추천지수가 29로 비교군 하위 5분의 1이었고, 약관을 잘 이해한다고 답한 대출자는 59%였다. 채무불이행자의 37%가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이유로 꼽았다. 식스포인트는 120일 안에 연간 총비용을 보여 주는 핵심 약관 화면과 실시간 수수료 알림을 도입하고 추천지수를 40으로 올리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한을 넘기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A.J. 데이비드슨 최고경영자는 "대출 장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출자는 왜 그랬는지를 알려 준다"고 했다.

쿠오나는 투자 뒤에 조사한다. 약 9억 달러를 운용하며 핀테크 70여 곳에 투자한 이 회사는 2020년 3개 기업 시범 사업 이후 해마다 몇 건씩 고객 조사를 하는데, 비용을 투자 기업과 나눠 낸다. 기업이 돈을 냈으니 결과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설계다. 실제로 기업들은 결과를 제품 설계·가격·신규

고객층 진출에 썼다. 액시온벤처스의 조사는 대표 숫자 뒤에 숨은 문제를 드러냈다. 탄자니아에서 모바일머니 대리점에 대출을 내주는 쿠운다는 고객 추천지수가 90으로 상위 20%였지만, 같은 고객의 34%가 통신망 불안정을 문제로 꼽았다.

같은 주 미국 사회혁신 전문지는 고객의 말을 듣는 일이 '부드러운 선택지'가 아니라는 기고를 실었다. 무작위 대조 실험을 맨 위에, 고객 조사를 맨 아래에 두는 방법의 위계는 정교함을 진지함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고는 세계은행의 국가별 빈곤 통계도 결국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 얻은 답으로 만든다고 짚었다. 인도에서 열린 기업 사회공헌 리더십 서밋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은 실행 전에 지역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해, 지원이 끝난 뒤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지로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돈의 조건도 바뀌고 있다. 같은 호에 이 지면은 90여 개 펀드와 60여 건의 직접 투자로 거의 손익분기 수준의 결과를 공개한 세니아스를 전했다. 이번 주 같은 매체는 세니아스처럼 시장 수익률 대신 '임팩트 우선'으로 투자하는 출자자들을 묶어 소개했다. 존·로라 아널드 부부의 아널드벤처스는 최저 수익률을 두지 않는 대신, 같은 위험의 시장 금리와 비교해 각 투자가 사실상 얼마의 보조금을 준 셈인지를 계산한다. 2% 대출과 시장 수익률에 가까운 투자, 순수 보조금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려는 것이다. 이케아재단은 2024년 시행된 네덜란드 공익기관법 때문에 상업적 수익을 좇을 수 없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으로 임팩트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의 2개 매체가 「60 Decibels·customer outcomes·impact first」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투자자의 조사 건수와 사례 수치는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의 연재 본문에서, 한국 공모 집계는 국내 공익 전문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국내에서도 같은 질문이 숫자로 나왔다. CTR그룹이 조성한 기업 필란트로피 기금인 신라상회기금은 2기 공모를 필란트로피 테크 기업 Giboo와 운영하며, 지원한 213개 조직 가운데 20곳을 대면심사에 올렸다. 지원 조직의 약 60%는 연 수입 3억 원 이하였고, 성과 변화 값을 입력한 조직은 123곳, 참여 전후를 비교한 측정값을 기록한 조직은 12곳이었다. 지원 이력 1,153건 가운데 사업비 지원이 849건(74%), 운영비 지원은 177건(15%)이었다. Giboo는 측정 여력 부족이 개별 조직의 역량보다 사업비 중심 지원 구조와 관련 있다고 봤다. 국내 지원 기관이 성과 측정을 요구하려면, 쿠오나처럼 측정 비용의 일부를 함께 내는 방식부터 검토할 만하다.

> 🔒
> **심층 — 측정의 주인이 바뀔 때 생기는 일 (60 디시벨스 연재 · SSIR 기고 · 임팩트 우선 출자자 · 신라상회기금 공모 집계)**

왜 지금 중요한가. 임팩트 측정은 오랫동안 출자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일이었다. 지표는 투자자가 정했고, 숫자는 투자 기업이 채웠다. 이번 주 세 투자자의 사례는 측정이 신용 위험과 영업 위험을 미리 알려 주는 정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식스포인트는 고객 조사를 'ESG 보고 항목'이 아니라 신용·영업행위 위험 정보로 다루고, 대출자가 겪는 불투명한 약관과 거친 추심이 결국 회수율 문제로 돌아온다고 판단했다. 측정이 보고에서 의사결정으로 옮겨 가는 순간, 측정의 질을 따지는 사람이 출자자에서 투자 담당자 자신으로 바뀐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고객의 말을 계약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투자자와, 그 조건을 제품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기업이다. 쿠오나 투자 기업 가운데 한 곳은 조사 결과를 보고 고객경험 전담팀을 만들었다. 불리해지는 쪽은 높은 대표 점수 뒤에 문제를 숨겨 온 기업이다. 쿠운다의 추천지수 90 뒤에 34%의 통신망 불만이 있었듯, 고객 조사는 대표 숫자를 쪼개 본다. 연체자를 일부러 많이 조사하는 식스포인트의 방식은 가장 불만이 큰 사람의 목소리를 표본에서 지우지 않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사회적금융과 기업 사회공헌 기금은 대부분 사업 종료 시점의 성과 보고서로 측정을 끝낸다. 신라상회기금 집계에서 사전·사후 비교값을 낸 조직이 12곳이었다는 것은, 측정의 출발점이 아직 사업 전 기준값을 남기는 단계라는 뜻이다. 지원 기관은 공모 단계에서 '사업 시작 전 수혜자 10명에게 같은 질문 세 개를 던져 기록하라' 정도의 작은 요구부터 시작하고, 그 비용을 운영비로 따로 인정하는 방식을 시험할 수 있다.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뒤 공공 지원의 성과 기준을 정할 때도 수혜자 응답을 하나의 축으로 넣을 만하다.

놓치기 쉬운 함정. 고객 조사도 설계를 잘못하면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된다. SSIR 기고가 짚은 것처럼 핵심은 응답자에게 거짓으로 답할 이유가 있는지, 질문지가 편향을 줄이게 설계됐는지다. 대출 기관이 직접 고객에게 만족도를 물으면 고객은 다음 대출을 걱정해 좋게 답할 수 있다. 식스포인트가 제3자 조사 기관을 쓰고, 액시온이 투자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 조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널드벤처스의 '보조금 환산'도 같은 함정을 안고 있다. 양허의 크기를 재는 것과 그 양허가 만든 변화를 재는 것은 다른 일이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1) — How three fintech investors put customer outcomes at the center of their decisions · ImpactAlpha (미국, 2026-11) — SixPoint Capital: Why we survey borrowers before we lend · ImpactAlpha (미국, 2026-11) — Accion Ventures: How customer surveys sharpen our early-stage bets ·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미국, 2026-11) — Listening Is Not the 'Soft' Option · ImpactAlpha (미국, 2026-11) — 'Impact first' lets a new set of LPs match their capital to the challenges · India CSR (인도, 2026-11) — Innovation in CSR Requires Community Ownership, Leadership and Patient Capital: India CSR Summit Panel · 더나은미래 (한국, 2026-11) — 규모보다 현장의 실천…신라상회기금이 주목한 사회문제 해결 조직 20곳

선거가 끝나자 ESG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 갔다 — 중간선거에서 진 반ESG 후보들, 의결권 자문을 겨눈 켄터키 법에 소송을 낸 종교계 투자자들, 기후 위험 점수를 '기만'이라 고소한 플로리다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다. 영국 책임투자 전문 매체는 대표적인 ESG 비판론자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졌고, 민주당이 텍사스에서 압승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ESG 매체에 따르면 제임스 탈라리코는 텍사스에서 38년 만에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가 됐다. 같은 매체는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쥔 채 남아 있어, 의회 권력의 변화가 지난 2년의 규제 완화와 연방 지원 삭감을 곧바로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선거로 바뀌지 않는 싸움은 이미 법정에 있다. 켄터키주 의회는 올해 3월 상원법안 183호를 통과시켰다. ESG를 포함한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결권 자문사는 그 자문이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해야 한다는 법이다.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3월 27일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는 3월 31일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맞서 종교계 기관투자자 연합인 기업책임종교센터(ICCR)와 지속가능성 비영리단체 세레스, 미국 연합그리스도교회 연금기금이 10월 29일 켄터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은 이 법이 견해와 내용을 기준으로 표현을 차별하고, 믿지 않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수정헌법 1조와 14조를 어긴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기후 위험 데이터도 정치의 표적이 됐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10월 23일 기후 위험 모델링 기업 퍼스트스트리트를 주 기만적·불공정 거래행위법 위반으로 주 법원에 고소했다. 퍼스트스트리트가 질로·레드핀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 제공하는 주택별 홍수·화재·폭염·대기질 위험 점수가 잘못된 요인에 근거해 플로리다 주택을 더 늦게, 더 싸게 팔리게 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은 퍼스트스트리트의 홍수 위험이 연방재난관리청 홍수지도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퍼스트스트리트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역 단위로 위험을 추정하는 반면 자신들은 개별 주택 단위로, 변하는 기후 조건과 집중호우까지 반영해 계산한다고 설명해 왔다.

시민사회는 재원 복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 비영리 전문지에 따르면 비영리·재단 연합체 인디펜던트섹터의 아킬라 왓킨스 대표는 새 의회가 연구·복지 서비스·교육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과 영양 지원 같은 안전망 예산을 되살리기를 기대했다. 백악관은 지난 2년 동안 비영리단체 연방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보류했다. 재단 쪽 움직임도 이어졌다. 지난 호에 짚은 포드재단의 전략 개편은 이번 주 액수가 나왔다.

포드재단은 '21세기 권위주의'와 불평등에 맞서는 새 전략에 2027년 7억 달러를 쓰고, 7개 분야에 더 크고 긴 일반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서양 건너 독일에서는 로베르트보쉬재단이 시민사회 단체 754곳을 조사한 첫 '확신 지표'를 냈다. 72%가 앞날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73%가 관료주의와 행정 부담을 짐으로 꼽았고,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힘이 되는 요인으로 꼽은 곳은 51%에 그쳤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3개 매체가 「midterm·ESG」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에는 거의 없던 이야기가 새로 늘었다. 켄터키 소송과 플로리다 소송의 날짜·법 조항은 미국 ESG 매체 본문에서, 독일 조사 수치는 독일 비영리 전문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켄터키가 의결권 자문을 좁히는 사이, 한국은 주주가 판단할 정보를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고쳐, 2027년 제출분부터 코스피 상장사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금액을 공개했는지 적게 했다. 주주가 제안할 시간을 정보 공개 시점과 묶은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의결권 자문과 ESG 데이터가 정치적 공격을 받을 때 무엇이 먼저 흔들리는지를 보여 준다. 국내 연기금과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기준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넣을 때, 그 요소가 장기 재무 위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준 문서 안에 적어 두는 것이 정치적 논란에도 버티는 방법이다.

🔒

심층 — 정치가 바뀌어도 남는 것은 판례다 (켄터키 상원법안 183호 소송 · 플로리다 대 퍼스트스트리트 · 포드재단 2027년 계획 · 로베르트보쉬재단 확신 지표)

왜 지금 중요한가. 반ESG 정치는 선거에서 졌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주 의회에서 만든 법과 주 법무장관의 소송은 그대로 남는다. 켄터키 법과 플로리다 소송은 각각 의결권 자문과 기후 위험 데이터라는, 지속가능 투자의 정보 기반을 겨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 조언'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지, '기후 위험 점수'가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판례는 선거보다 오래 간다.

승자와 패자. 소송에서 이기면 유리해지는 쪽은 주주제안과 의결권 행사로 기업에 장기 위험을 묻는 종교계·연기금 투자자, 그리고 독립적인 위험 데이터를 파는 기업이다. 지면 쪽에 서는 쪽은 공공 데이터(연방재난관리청 홍수지도)에 기대 위험을 낮게 평가받아 온 부동산 소유자와 지역 경제다. 플로리다 소송은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 것과 지역 재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다. 비영리 쪽에서는 연방 재원에 기대던 단체가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일부를 되찾을 수 있지만, 포드재단처럼 일반 운영비를 늘리는 재단과 일하는 단체가 먼저 숨을 돌린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고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7년 5월 31일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국내 운용사와 연기금은 그 전에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판단 근거로 쓰는 항목을 골라, 그것이 기업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붙여 둘 수 있다. 기후 위험 데이터를 쓰는 국내 금융기관과 부동산 플랫폼은 데이터의 산정 단위(지역·개별 자산)와 공공 지도와의 차이를 이용자에게 함께 밝히는 편이, 플로리다식 분쟁을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선거 결과를 'ESG의 귀환'으로 읽는 것은 성급하다. 이탈리아 ESG 매체가 짚은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남아 있고, 연방 기관의 규칙 변경은 의회가 바로 되돌리기 어렵다. 또 반ESG 법안의 상당수는 연방이 아니라 주 단위에 있어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독일 조사에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힘으로 꼽은 시민사회 단체가 절반에 그쳤듯, 정치 환경의 변화에 기대는 전략은 어느 나라에서든 불안정하다.

출처: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11) — ESG opponents lose US midterm races in Republican 'rout' · ESG News (이탈리아, 2026-11) — Midterm, Trump perde il Congresso: cosa cambia per la sostenibilità americana · ESG Dive (미국, 2026-11) — Ceres, faith-based investors sue Kentucky over law targeting proxy advice · ESG Dive (미국, 2026-11) — Florida AG sues climate analytics provider First Street over home risk scores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11) — Nonprofits look for a reset following the midterms ·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11) — Ford Foundation to spend $700 million fighting '21st century authoritarianism' · Nonprofit-Magazin (독일, 2026-11) — Viel Zuversicht trotz unsicherer Finanzierung: So blickt die Zivilgesellschaft in die Zukunft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회복력은 보도자료로 생기지 않는다 — 필요액의 10분의 1에 그친 적응 재원, 등산로 21마일이 가게 24곳을 부른 노스캐롤라이나, 2년 만에 첫 마감을 넘긴 중남미 기후 회복력 펀드

5주 전 이 지면은 '적응에 값이 매겨지기 시작했다'는 제목으로 일본 은행의 첫 적응 정합성 확인과 102개 적응 활동의 투자성 지도를 전했다. 이번 주에는 그 값이 얼마나 모자란지를 보여 주는 숫자가 나왔다. 스페인 사회책임 매체가 소개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6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2035년까지 해마다 약 3,050억 달러가 있어야 기후 영향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이들 나라로 간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은 282억~317억 달러였고, 2023년보다 약 10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50억 달러에는 민간 부문의 필요가 빠져 있어, 실제 필요액은 두 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 사회혁신 전문지에는 이 간극을 정면으로 다룬 기고가 실렸다. 9~2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기후 분야가 선언·로드맵·공동성명은 잘 만들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체계는 위험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이다. 기고는 2009년에 정한 연 1,000억 달러 기후재원 목표가 2020년이 아니라 2022년에야 달성된 것으로 보고됐고, COP30에서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세 배로 늘리기로 한 합의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투자 의향은 집행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기고의 요지다.

현장에서 회복력을 만드는 방식은 다른 모습이었다.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가 시작한 단편 다큐멘터리 연재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의 작은 마을 올드포트를 첫 회로 다뤘다. 피스가 국유림의 등산로와 산악자전거길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전략을 짠 이 마을에는 2022년 이후 21마일의 길이 만들어지는 동안 새 가게 24곳이 문을 열었다. 2024년 9월 허리케인 헐린이 지역을 덮쳤을 때, 그동안 공동체 네트워크와 지도력에 쌓아 온 투자가 상호부조로 돌아왔다. 20억 달러 규모의 보건 전환 재단 도그우드헬스트러스트가 지역 경제 기회에 돈을 댔고, 중부 애팔래치아 6개 주의 지역 투자 중개기관 인베스트애팔래치아는 맥아더재단과 로버트우드존슨재단 등의 출자로 3,550만 달러 규모 첫 펀드를 만들었다.

같은 매체는 중남미 기후 회복력 자본의 현실도 전했다. 캐나다 밴쿠버의 임팩트 운용사 디트켄임팩트는 2년의 모금 끝에 3억 달러 목표의 '포용적 기후행동 펀드'에서 1억 달러 첫 마감을 넘겼다. 캐나다 정부의 개발협력 부처인 글로벌어페어스캐나다가 촉매 자본 7,500만 달러를 앵커로 넣었고, 페루 개발은행 코피데가 선순위에 1,500만 달러를 넣었다. 펀드는 중남미·카리브 17개 시장에 투자하되 한 나라 비중을 25%로 제한하고, 500만~1,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한다.

디트켄은 모금이 늦어진 이유로 지정학 환경, 신흥국 위험 인식, 회수 지연에 따른 출자자 유동성 부족을 꼽았다. 일본 손해보험사 도쿄해상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10년 넘게 국제금융공사(IFC)의 신흥국 채권에 신용보험을 써 온 도쿄해상이, 이번에는 IFC와 스위스 임팩트 운용사 블루오처드가 20억 달러를 목표로 만드는 신흥국 채권 전략에 3억 달러를 앵커로 넣었다.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던 쪽이 그 위험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7개 매체가 「adaptation finance·adaptation gap·climate resilience」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UNEP 보고서 수치는 스페인 사회책임 매체 본문에서, 노스캐롤라이나·디트켄·도쿄해상 사례는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국내에서도 회복력 기술에 돈을 대는 작은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교통·환경챌린지'는 5일 8기 데모데이를 열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와 빗물 유출 수질오염을 줄이는 솔루션을 낸 비온모먼트가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스타트업은 50곳이고, 참여 기업에는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보고서를 준다. 도쿄해상 사례가 보여 주듯 보험사는 위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투자자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발굴한 회복력 기업을 실제 투자나 보험 상품 설계로 잇는다면, 지원 사업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

> 🔒

심층 — 적응 재원이 늘지 않는 이유와 늘어나는 곳 (UNEP 2026 적응 격차 보고서 · SSIR 기고 · Power in Place · 디트켄·도쿄해상)

왜 지금 중요한가. 감축은 투자 수익(전기 판매·에너지 절감)이 분명하지만, 적응은 '일어나지 않은 피해'가 수익이라 돈이 잘 붙지 않는다.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이 1년에 10억 달러밖에 늘지 않은 이유다. 이번 주 사례들은 그 구조를 우회하는 두 경로를 보여 준다. 하나는 올드포트처럼 회복력을 지역 경제 전략(관광·소상공인)과 묶어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만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도쿄해상처럼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가 위험 인식의 과장을 데이터로 깨고 들어오는 길이다. COP31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는 아직 모르지만,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경로는 이미 보인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지역 금융 중개기관을 가진 곳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재해 뒤 회복을 이끈 것은 지역 소상공인 대출기관과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이었고, 이들은 재해 전부터 쌓아 둔 관계와 자본을 썼다. 신흥국 위험이 과장돼 있다는 데이터를 가진 보험사·개발금융기관도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중간 규모의 임팩트 운용사다. 디트켄은 펀드 규모를 키우자 기존 출자자들이 크게 참여하지 못했고, 대형 기관은 더 큰 운용사를 선호했다. 지난 호에 전한 104억 달러 규모 사모펀드 기후 펀드처럼 큰 운용사로 돈이 쏠리는 흐름 속에서 중간 규모 운용사가 가장 오래 모금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지방정부와 지역 금융기관은 재해 복구 예산과 지역 경제 지원을 따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올드포트 사례는 둘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뒤 만들어질 지역 사회연대금융 중개 구조에 재해 회복력 사업을 처음부터 넣는다면, 재해가 났을 때 움직일 지역 자본과 관계가 미리 준비된다. 손해보험사는 환경재단·DB손해보험 사례처럼 지원 프로그램에서 만난 기업을 보험 상품 설계 협력으로 넓혀 볼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회복력 투자가 관광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과 묶이면, 그 이익이 원래 살던 주민에게 가지 않을 위험이 있다. 등산로가 가게를 부르면 임대료도 오른다. 노스캐롤라이나 사례가 공동체 네트워크와 지역 대출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또 3,050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민간 자본이 공공 재원을 대신할 것이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가장 취약한 지역의 적응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몫은 여전히 공공과 양허성 자본의 일이다.

출처: Diario Responsable (스페인, 2026-11) — La adaptación climática, al borde del colapso financiero ·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미국, 2026-11) — Climate Resilience Will Not Be Built by Press Release · ImpactAlpha (미국, 2026-11) — The Brief: Economic and climate resilience in North Carolina · ImpactAlpha (미국, 2026-11) — Deetken Impact wades into institutional territory with climate resilience growth fund · ImpactAlpha (미국, 2026-11) — With BlueOrchard fund, Tokio Marine shifts its risk perspective in emerging markets · 더나은미래 (한국, 2026-11) — 도시 침수부터 전기차 화재까지…사회문제 해결 나선 스타트업 8곳

자연에 매긴 값과 실제로 들어온 돈 — 65개국이 지지하고 8개국이 돈을 낸 열대우림 기금, 금액을 적지 않은 예레반 경로, 연 9억 9,300만 달러가 모자란 필리핀

1년 전 브라질 벨렝의 COP30에서 출범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은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했다. 숲을 지킬 여력이 없는 나라에, 숲을 지키는 것이 돈이 되게 만드는 1,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세우자는 것이다.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매체가 전한 1년의 성적표는 엇갈린다. 65개국 이상이 기금을 지지했지만 실제로 돈을 약속한 나라는 8곳, 금액은 78억 달러다. 가장 최근은 네덜란드의 5억 달러다.

기금은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데, 노르웨이의 30억 달러 약속은 이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걸려 있다. 세계은행이 수탁기관을 맡은 기금은 2027년 가동되지만 첫 지급은 2028년 이전에는 어렵다. 숲 훼손을 어떻게 감시하고 벌할지, 기금이 무엇에 투자할지, 원주민 공동체가 몫을 어떻게 받을지는 아직 협상 중이다. 세계자연기금 브라질의 마우리시우 보이보지치 대표는 "방탄 상태로 출범하지 않았다"며 고쳐 가며 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끝난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는 돈의 숫자를 적지 않았다. 4년 전 합의한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 가운데 완전히 긍정적인 궤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검 결과에 대응해 '예레반 경로'를 채택했지만, 선진국과 "여력이 있는 나라"에 개도국 지원 확대를 "강력히 권장"할 뿐 금액은 없다. 경제·금융 체계 전환과 유해 관행 개혁을 요구하던 초안의 문구도 빠졌다.

필요액과 실제 조달액 사이의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는 약 7,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개별 국가의 장부는 더 구체적이다. 필리핀 생물다양성관리국에 따르면 국가 생물다양성 목표 23개를 이행하는 데 연 14억 5,000만 달러가 들지만 정부 배정액은 3억 3,900만 달러이고, 연 9억 9,310만 달러가 모자란다. 필리핀은 공공·국제원조·민간 투자를 섞는 혼합금융을 늘리기로 했고, 예레반 생물다양성 재원 과제의 10개 선정국으로 최대 20만 달러의 기술 지원을 받는다.

민간 쪽의 약속은 작은 규모로 이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찰스 3세 국왕이 출범시킨 지속가능 시장이니셔티브, 프랑스 투자회사 유라제오는 자연 복원·생물다양성 보호 사업에 투자하는 '라이트하우스 이니셔티브'를 4,000만 달러로 시작했다. 영국의 블루이코노미 투자 플랫폼 아웃리거임팩트는 군소도서개발국의 해양 경제 기업에 지분·대출을 대는 1억 달러 목표의 혼합금융 펀드 첫 마감을 발표했다.

군소도서국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세계 바다의 약 30%를 관할하고 산호초의 약 40%를 품고 있지만 개발 재원은 적게 받는다. 브라질은 COP31을 앞두고 화석연료 전환과 2030년 산림파괴 중단을 위한 두 개의 국제 로드맵을 내놨다. 브라질 경제 매체에 따르면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손실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86%를 차지한다. 다만 로드맵은 당사국 협상 대상이 아닌 자발적 제안이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8개국 20개 매체가 「TFFF·biodiversity finance」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39.9배 늘었다. 열대우림 기금·COP17·필

리핀 수치는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매체 본문에서, 민간 펀드는 국제 ESG 매체 본문에서, 브라질 로드맵은 브라질 경제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확인된 근거 없음 — 국내 금융기관이 열대우림 기금이나 생물다양성 펀드에 출자했는지, 한국 정부가 예레반 회의에서 어떤 재원 입장을 냈는지를 확인하면 국내 자본이 이 흐름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주 국내 매체에서 이를 다룬 기사는 찾지 못했다. 다만 필리핀이 보여 준 '목표 이행 비용과 정부 배정액의 차이'를 공개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도 바로 쓸 수 있다. 생물다양성 국가 목표마다 필요 비용과 실제 예산을 나란히 적는 장부가 있어야, 민간 자본에 어떤 몫을 요청할지도 정할 수 있다.

🔒

심층 — 자연 재원은 약속과 집행 사이의 거리를 가장 길게 보여 준다 (TFFF 1주년 · COP17 예레반 경로 · 필리핀 생물다양성 재원 · 라이트하우스·아웃리거)

왜 지금 중요한가. TFFF는 원조가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숲 보전 대가를 치른다는 새로운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구조의 약점이 보인다. 투자 기금은 큰 원금이 먼저 모여야 돌아가는데, 지지와 출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노르웨이처럼 다른 나라의 출자를 조건으로 거는 약속은 서로를 기다리는 구조를 만든다. 예레반 경로가 금액을 적지 못한 것도 같은 문제다. 자연 재원은 '누가 먼저 낼 것인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약속의 크기가 집행을 보장하지 않는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자기 장부를 공개하는 나라다. 필리핀은 필요액과 배정액, 격차를 숫자로 내놓았고, 그 덕에 혼합금융 기술 지원 대상국이 됐다. 혼합금융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유라제오·아웃리거)도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 사이의 다리 역할로 몫을 늘린다. 불리해지는 쪽은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다. TFFF에서 이들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레반 경로에서는 원주민 권리 문구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돈이 늦게 들어올수록 숲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이의 비용을 먼저 치른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확인된 근거 없음 — 국내 금융권의 자연 관련 투자 규모와 정부의 생물다양성 예산 집행률을 확인하면 출발점을 잡을 수 있다. 방법은 필리핀 사례가 보여 준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목표별 비용과 예산을 나란히 공개하고, 금융기관은 그 격차 가운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생태관광·지속가능 어업·재생농업)을 골라 혼합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순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자연 관련 공시 지침을 다듬는 중이라, 국내 대기업은 공급망의 자연 의존도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공시 대비에도 쓸모가 있다.

> **놓치기 쉬운 함정.** 자연 펀드의 '첫 마감' 소식을 시장 형성의 증거로 읽으면 안 된다. 라이트하우스의 4,000만 달러와 아웃리거의 1억 달러 목표는 7,000억 달러 격차에 비하면 시범 규모다. 이 펀드들이 실제로 수익과 생물다양성 성과를 함께 낼 수 있는지는 몇 년 뒤에야 확인된다. 또 생물다양성 성과를 재는 지표(생물다양성 발자국 등)는 아직 표준이 없어, 같은 투자를 두고 성과를 부풀릴 여지가 크다.

출처: Eco-Business (싱가포르, 2026-11) — The 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urns one, and is billions short · Eco-Business (싱가포르, 2026-11) — COP17: Yerevan pathway for nature leaves out the money and the detail · Eco-Business (싱가포르, 2026-11) — Philippines eyes blended finance to bridge estimated US$1 billion nature funding gap after COP17 · ESG Today (국제, 2026-11) — BofA, SMI, Eurazeo Launch New Biodiversity Solutions Fund · ESG Today (국제, 2026-11) — Outrigger Impact Launches $100 Million Blue Economy Fund · Brazil Journal (브라질, 2026-11) — O plano brasileiro para enfrentar a crise climática

공공의 장바구니가 사회적 가치를 고르는 방법 — 일자리와 기술로 좁혀진 영국의 사회적 가치 지침, 8년 만에 처음 내려간 네덜란드 지속가능 조달 점수, '문제를 정하는 자리'를 묻는 이탈리아

공공 조달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번 주 세 나라에서 그 수단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 영국 정부는 조달 담당자를 위한 새 사회적 가치 지침(조달정책노트 026)을 발표했다. 영국 사회적기업 협의체 소셜엔터프라이즈UK에 따르면, 정부는 일하지도 공부하지도 않는 16~24세 청년이 100만 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일자리와 기술 창출로 좁혔다. 건강과 복지, 환경, 취약 계층 지원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 항목은 빠지는 셈이다. 100만 파운드 이하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가중치를 없앤다는 방침도 나와,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자원이 많은 영리 기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셜엔터프라이즈UK는 회원 설문으로 네 가지 권고를 냈고, 이번 지침에서 그 결과를 점검했다. 공급망 다양성을 평가 항목으로 되살리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좋은 일자리' 항목의 기준에 공급망 안의 중소기업·스케일업·비영리·사회적기업 수를 늘리는 활동이 들어갔다. 100만 파운드 이하 계약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우선 주자는 요구는 의무가 아니라 강한 권고에 그쳤다. 대신 지침은 "비영리·사회적기업 같은 일부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기본으로 만들어 낸다"고 적었다. 사회적 가치를 별도 점수로 증명하지 않아도 조직의 성격 자체를 인정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반대 방향의 숫자가 나왔다. 네덜란드 건설협회 바우엔트네덜란드가 8년째 내는 '지속가능 조달 상위 25' 목록에서 처음으로 점수가 내려갔다. 상위 25개 발주처의 평균 점수는 3.98에서 3.83으로 떨어졌고, 발주처들이 지속가능성보다 최저가를 더 자주 고른 결과다. 그래서 올해는 점수를 가장 많이 올린 발주처를 따로 시상했다. 위트레흐트대학교는 80위(2.00점)에서 23

위(3.27점)로 뛰었고, 자위트홀란트주는 두 해 전 62위에서 공동 3위(4.50점)로 올랐다. 헬몬트시는 지난해 4분기 네 건의 발주 가운데 세 건이 최고점을 받았는데, 배출을 더 줄이겠다고 제안하는 시공사에 일관되게 가점을 주고 설계의 환경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지표를 썼다.

이탈리아 복지 연구 매체는 조달보다 앞 단계를 물었다. 이탈리아 제3섹터법 55조의 '공동기획'은 행정이 혼자 할 때보다 필요를 더 잘 읽자는 약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운영 논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기고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은 접근성·대기 명단·제공 건수를 보고,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교통·언어의 장벽을 본다며, 탁자에 앉는 것만으로는 그 관점이 문제 정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5개 매체가 「social value·aanbesteders·coprogrammazione」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지침 내용은 영국 사회적기업 협의체 발표문에서, 네덜란드 점수는 네덜란드 지속가능경영 매체 본문에서, 이탈리아 공동기획 논의는 이탈리아 복지 연구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2027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를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5주 전 이 지면은 시행령에 위임된 우선구매 비율을 두고 3%와 5%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다고 전했다. 영국 지침은 그 숫자만큼이나 '무엇을 사회적 가치로 셀 것인가'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의를 일자리로 좁히면 측정은 쉬워지지만 돌봄·환경·지역 공동체 같은 다른 가치를 만드는 조직이 밀린다. 국내 하위 규정을 만들 때 조직 유형 자체를 인정하는 조항과 성과 지표를 함께 두는 영국식 이중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

🔒

심층 — 조달 규칙의 한 줄이 시장의 모양을 정한다 (영국 조달정책노트 026 · 네덜란드 지속가능 조달 상위 25 · 이탈리아 공동기획 논의)

왜 지금 중요한가. 공공 조달은 보조금보다 훨씬 큰 돈이 오가고, 매년 반복되며, 시장에 '무엇이 팔리는가'를 알려 준다. 그래서 조달 규칙의 작은 정의 변화가 사회적기업과 지속가능 시공사의 생존을 좌우한다. 영국은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로 좁혔고, 네덜란드 발주처들은 비용 압박 속에 최저가로 돌아섰다. 재정이 빠듯해질 때 공공 조달이 가장 먼저 '측정하기 쉬운 가치'와 '가장 싼 가격'으로 후퇴한다는 같은 패턴이다. 한국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 규정을 만드는 지금, 그 후퇴를 막을 장치를 넣을지 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승자와 패자. 영국에서 유리해지는 쪽은 청년 고용과 훈련을 사업 모델로 가진 사회적기업과, 그것을 숫자로 보고할 체계를 가진 대형 공급자다. 불리해지는 쪽은 건강·환경·취약 계층 지원처럼 일자리 수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를 만드는 작은 조직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헬몬트처럼 환경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지표를 일관되게 쓰는 발주처가 지속가능 시공사를 키우고, 최저가로 돌아선 발주처는 그 시장을 줄인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발주처의 선택이 시장을 가른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구매 비율 달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과 종합계획이 정해지는 2027년 3월 전후가 그 틀을 바꿀 기회다. 하위 규정에는 구매 비율과 함께 ①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 자체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조항 ② 발주처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평가했는지 공개하는 의무 ③ 소액 계약의 우선 배정 권고를 함께 넣을 수 있다. 네덜란드처럼 발주처별 순위를 공개하는 민간 평가도 발주처의 선택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정의하면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 평가가 주관적이 되면 발주처가 아는 업체를 고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정의를 좁힌 것도 측정 가능성과 일관성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공동기획 논의가 짚은 것처럼, 문제를 정의하는 자리에 누가 앉는지가 투명하지 않으면 '참여'라는 이름으로 기존 공급자의 관점만 강화될 수 있다. 넓은 정의와 투명한 절차는 같이 가야 한다.

출처: Social Enterprise UK (영국, 2026-11) — New social value guidance for commissioners published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1) — Top 25 duurzame aanbesteders: Helmond, Zuid-Holland en Universiteit Utrecht stijgen sterk ·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11) — Coprogrammazione: chi siede al tavolo quando si definisce il problema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녹색 꼬리표가 붙은 돈의 장부 — 시중은행 최대 3,000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 녹색 증권에 올라탄 중소기업 3곳, 그리고 '1년 만에 세 배'가 된 배출권 가격

4주 전 이 지면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1,000조 원이 지나갈 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이라는 숫자가 실제 어떤 문을 지나갈지 물었다. 이번 주 그 문을 지나간 돈의 일부가 장부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와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을 보강해 발행하는 증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접목한 제도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녹색투자를 늘린 우리은행과 한국남동발전이 장관상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 태솔이엔지·부경금속·하우스사라가 상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 등에서 일한 유공자 7명도 표창을 받았다.

우리은행의 숫자는 시중은행 녹색채권 시장의 크기를 가늠하게 한다. 국내 공익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500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올해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으로 늘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이 발행했다. 누적 발행액은 6,000억 원이다. 조달한 돈은 태양광·풍력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K-택소노미에 맞는 사업에 공급된다. K-택소노미 적격 사업에 내준 녹색여신은 9월 말 기준 약 1조 7,000억 원이다.

녹색금융이 커지는 배경에는 탄소의 가격이 있다. 국내 ESG 전문 매체에 실린 분석 기고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5%로 늘었고, 발전부문은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철강·석유화학 같은 탄소누출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이 유지되지만 배출허용총량 자체가 줄었다. 배출권 가격은 연초 1만 원대에서 약 세 배인 3만 원 선이 됐다. 기고는 K-GX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탄소가격의 압력, 지원한 기술의 현장 효과 검증, 공공 지원이 민간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짚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6월 공개한 공공건축물 522개 동의 그린리모델링 분석에서 실제 연간 절감 효과는 ㎡당 약 20.4kWh로 사전 예측치 33kWh의 약 60%였다는 사례도 들었다.

세계 은행권의 장부도 같은 주 나왔다. 같은 매체가 전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은행이 올해 녹색채권 인수와 기후 대출 주선으로 번 수수료는 약 30억 달러로, 화석연료 기업 금융 수수료 약 29억 달러를 5년 연속 앞질렀다. 그러나 실제로 주선한 에너지 공급 금융은 여전히 화석연료 쪽이 많아, 블룸버그NEF 기준 화석연료 금융 1달러당 저탄소 에너지 금융은 0.97달러였다.

유럽은 2.5대 1, 중국은 1.6대 1이었지만 북미는 0.5대 1로 내려갔다. 녹색금융이 작은 기업에 닿기 어렵다는 숫자도 나왔다. 멕시코 지속가능경영 매체가 소개한 세이지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사에서, 녹색 금융을 알아본 중소기업의 80%가 복잡한 절차와 중복된 ESG 자료 요구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녹색기술 투자 격차는 1조 1,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5개 매체가 「녹색채권·녹색금융」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5건이다. 시상 기업과 제도 설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우리은행 발행액은 국내 공익 전문 매체 본문에서, 배출권·그린리모델링·은행 수수료 수치는 국내 ESG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시상에 중소기업 3곳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 녹색금융이 대기업과 발전 공기업 밖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멕시코 조사가 보여 주듯 작은 기업이 녹색 금융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아니라 절차와

중복 자료 요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 것은 그 점에서 맞는 출발이다. 다음 단계는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하면 은행·보증기관·증권 발행사가 함께 쓰는 공통 양식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은행처럼 발행을 늘린 은행이 협력사의 녹색 전환 대출까지 같은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 효과는 더 커진다.

🔒

심층 — 녹색 꼬리표는 붙었고, 이제 성과를 묻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금융 시상 · 우리은행 녹색채권 · K-GX 점검 기고 · 블룸버그 은행 수수료 집계 · 세이지·ICC 중소기업 조사)

왜 지금 중요한가. 한국형 녹색채권은 도입 초기에 '무엇이 녹색인가'를 정하는 데 힘을 썼다. K-택소노미가 그 답이었고, 이제 은행과 공기업의 발행 실적이 쌓이고 있다. 다음 질문은 그 돈이 실제로 얼마의 감축을 만들었는가다. 그린리모델링의 실제 절감이 예측의 60%였다는 분석은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탄소 가격이 1년 만에 세 배가 된 지금, 녹색 투자의 성과를 제대로 재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탄소 비용을 실제로 아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꼬리표만 남는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녹색채권 조달 자금의 사용처와 성과를 사업 단위로 공개할 수 있는 발행사다. 배출권 유상할당이 늘수록 감축 실적이 곧 비용 절감이 돼, 성과 데이터가 있는 기업은 금리와 탄소비용 양쪽에서 이득을 본다. 중소기업 가운데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처럼 정부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받은 기업이 먼저 시장에 들어온다. 불리해지는 쪽은 녹색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배출권 비용만 늘어나는 중견 제조기업이다. 이들은 무상할당 축소와 녹색금융 접근성 부족이라는 두 압박을 함께 받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유상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 녹색채권 발행으로 장관상을 받은 한국남동발전 같은 발전 공기업은 발전부문 유상할당이 2030년 50%까지 오르는 만큼, 조달 자금의 감축 성과가 곧 탄소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대상이다. 지금이 녹색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출 시점이다. 녹색채권 발행사는 자금 사용처별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을 함께 공개하는 사후 보고를 표준으로 삼고, 정부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 성과를 모아 제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을 처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기관이 산정 비용을 함께 지는 방식이 참여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은행의 녹색금융 수수료가 화석연료를 앞질렀다는 숫자는 '전환이 끝났다'는 증거처럼 보이지만, 실제 에너지 공급 금융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조금 더 많다. 수수료는 거래 건수와 구조의 복잡성을 따라가고, 녹색채권은 상대적으로 작고 많은 거

래가 많다. 국내에서도 녹색채권 발행액만으로 은행의 전환 정도를 평가하면 같은 착시가 생긴다. 녹색 자산과 화석연료 자산의 비율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정직한 장부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 2026-11) — 중소·중견기업 녹색금융 현장과 소통하고, 우수기업 성과 알린다 · 더나은미래 (한국, 2026-11) — 우리은행,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선정...기후부 장관상 수상 · IMPACT ON (한국, 2026-11) —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 K-GX, 성공적 녹색전환을 위한 점검 과제 · IMPACT ON (한국, 2026-11) — 은행들 녹색금융 수수료 4조5000억원 벌었다…5년 연속 화석연료 추월 · ExpokNews (멕시코, 2026-11) — ¿Quién financia la sostenibilidad de las pymes? La brecha ya alcanza un billón de dólares

숫자로 적게 하는 지배구조 — 코스피 826곳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여성 임원 20.4%에 멈춘 공공기관 345곳

2주 전 이 지면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책임'을 채점받기 시작하고,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의결 기준을 바꾼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주 주주가 판단할 정보를 넓히는 규칙이 하나 더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고쳐, 2027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고서 공시가 의무가 된 코스피 상장사 826곳(10월 말 기준) 전체가 대상이다.

2025년 9월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 2명 이상을 뽑을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사 수나 임기를 바꾼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야 한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할 때도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을 공개하고, 제3자 배정 여부·증자 규모·할인율·자금 사용 목적·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를 적어야 한다.

주주총회와 배당 정보도 넓어진다.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냈는지 공시하고, 못 냈다면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쓸 수 있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금액을 공개했는지도 적어야 한다. 자기주식은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최근 3년 치까지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10개 핵심원칙과 28개 세부원칙을 지키는지 공개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상장사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 낸다. 거래소는 지난해 허위공시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31건의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같은 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서는 다른 숫자가 나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과 국정감사 자료를 모아 3일 발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345곳의 임원 3,651명 가운데 여성은 744명(20.4%)이었다. 공공기관 직원 40만 1,361명 가운데 여성이 41.2%인 것과 비교하면 20.8%포인트 차이다. 여성 임원의 90.6%는 비상임직이었고, 상근하며 경영을 맡는 상임 임원 781명 가운데 여성은 9.0%였다.

공공기관 185곳(53.6%)은 여성 임원 비율이 20%에 못 미쳤고, 76곳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 가운데 22곳은 직원 1,000명 이상의 대형 기관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임원 1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원 12명이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 임원 비율은 2022년 22.7%에서 2025년 20.2%로 오히려 내려갔다. 정부가 2023년 세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의 목표는 2026년 25.4%, 2027년 26.2%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지배구조보고서·여성 임원」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건이다.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은 국내 ESG 매체의 정책 브리핑 본문에서,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치는 국내 공익 전문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두 숫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배구조를 '갖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숫자로 적게 하는 흐름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이제 유상증자 할인율과 자기주식 3년 치를 적게 하고, 공공기관 여성 임원 조사는 비상임과 상임을 나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따졌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와 경영평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쪽에서 보면 두 변화는 판단 재료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임팩트·ESG 투자자는 유상증자 할인율이나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처럼 소액주주 이익과 직결되는 항목을 의결권 행사와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있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발주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협력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심층 — 원칙 준수표에서 작동 기록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공공기관 여성 임원 공동조사)

왜 지금 중요한가. 한국의 지배구조 공시는 '준수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라' 방식으로 자랐고, 많은 기업이 원칙을 지킨다고 표시하는 데서 멈췄다. 이번 개정은 원칙의 준수 여부보다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이사 수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준 영향, 유상증자의 할인율과 지배주주 참여)를 적게 한다. 공공기관 조사가 비상임과 상임을 나눈 것도 같은 문제의식이다. 여성 임원 비율 20.4%라는 숫자 안에 상임 9.0%가 숨어 있었다. 숫자를 한 겹 더 쪼개면 지배구조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소액주주와 장기 투자자다. 배당 정보를 주주총회 6주 전에 받으면 주주제안을 준비할 시간이 생기고, 유상증자의 희석 효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처럼 수탁자 책임을 평가받는 연기금도 판단 근거가 늘어난다. 불리해지는 쪽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자본 거래를 반복해 온 기업과, 여성 임원을 비상임직으로만 채워 비율을 맞춰 온 기관이다. 숫자가 쪼개지면 형식적 대응이 드러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상장사는 2027년 5월 31일 첫 개정 보고서 제출 전에, 올해 있었던 이사회 구성 변경·유상증자·자기주식 거래의 의사결정 기록을 새 양식에 맞춰 정리해 둘 수 있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11월부터 공시 담당자 일대일 컨설팅과 설명회를 연다. 공공기관은 2026년 목표 25.4%와 현재 20.4%의 차이를 상임 임원 인사에서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경영평가 연계가 추진되면 그 계획이 평가 근거가 된다.

놓치기 쉬운 함정. 공시 항목이 늘면 공시 문장의 길이도 늘지만, 그것이 곧 지배구조의 개선은 아니다. 거래소가 지난해 정정공시를 31건 요구한 것은 공시의 질을 사후에 점검하는 장치가 아직 작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성 임원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비율을 의무로 정하면 비상임 자리로 숫자를 채우는 대응이 나올 수 있어, 상임·비상임을 나눈 목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1)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코스피상장사 내년 지배구조 공시 강화·금융권 580개사 보안 전수점검 · 더나은미래 (한국, 2026-11) — 공공기관 절반 이상 여성 임원 비율 20% 미달…상임 임원 중 여성은 9%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탄소크레딧으로 공정한 기후 행동을 하겠다던 사회적기업이 파산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법원은 10월 28일 페어클라이밋펀드를 파산 선고했다. 국제개발기구 ICCO가 2009년 세운 이 회사는 개도국 가정의 깨끗한 조리 기구 보급과 나무 심기 사업에서 나온 탄소크레딧을 팔아 사업비를 대고, 현지 가정에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지급해 왔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B 코프 인증 사회적기업이었다. 한 탄소크레딧 전문가는 현지 방송에 15~20년에 걸친 사업들이 투자 중단으로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래 가는 사업을 짧은 현금흐름에 기대 운영하는 모델의 위험이 드러났다.

출처: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1) — Sociale onderneming voor eerlijke klimaatactie FairClimateFund failliet verklaard

일본 기업 183곳이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일본 기후변화이니셔티브는 5일 COP31을 앞두고 수입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경제를 이루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히타치·파나소닉·소니·닛산·후지쓰·다이킨 등 기업 183곳과 지자체 9곳, 대학·연구기관 6곳, 단체 54곳 등 252곳이 서명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주 유럽연합의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초안에 대해, ISSB 기준 공시와 유럽용 공시를 따로 만드는 이중 부담을 피하게 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 호에 전한 역외기업 공시 줄다리기가 정부 차원으로 넓어졌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1) — 【日本】日立やパナ、日産、東急等183社、政府に再エネ拡大や電化要請。COP31前に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1) — 【日本・EU】日本政府、EUのESRS-40a基準に対し二重作成回避要請。時間制約を強調

AI가 바꾸는 일자리에 돈을 대는 두 가지 방식이 나왔다. 미국 재단 20여 곳은 AI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250개 지역을 5년 동안 돕는 10억 달러 규모 '올인포잡스'를 출범시켰다. 록펠러재단과 맥나이트재단 등이 이미 8억 달러를 약정했다. 아르헨티나 사회책임 매체는 AI 기업의 지분형 기부를 짚었다. 앤트로픽은 10월 18일 주주 승인을 전제로 주식의 5%를 공익 기금에 떼어 두고, 회사 가치가 기준보다 50% 오를 때마다 2%포인트씩 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 기금이 자선단체가 아니라 회사가 전부 지배하는 유한회사라 누가 배분을 결정할지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썼다. 지난 호에 전한 이 회사의 상장 서류 속 공익신탁 구조와 함께 볼 대목이다.

출처: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11) — US foundations launch $1 billion to protect jobs in the face of Ai · ComunicaRSE (아르헨티나, 2026-11) — La IA busca compensar sus impactos con inversión social

싱가포르가 연무 책임을 은행과 거래처까지 넓히는 법안을 냈다. 지난 호에 전한 싱가포르의 연무 책임 추궁이 법안이 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4일 국경 간 연무 오염법 개정안을 긴급 법안으로 의회에 올려, 하루 최대 벌금을 1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00만 싱가포르달러로, 총 상한을 200만에서 2,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열 배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화재 연루 의심 기업과의 거래를 공급업체·구매자·은행에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담았다. 2014년 제정된 이 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연무 피해는 최대 39억 싱가포르달러로, 2015년의 약 두 배로 추산됐다.

출처: Eco-Business (싱가포르, 2026-11) — Singapore eyes tenfold haze fines, supplier and bank curbs – even for this year's fires

사회연대은행과 KB국민은행이 성실 상환자의 이자를 절반 덜어 준다. 사회연대은행은 6일 KB국민은행이 사회공헌 재원 100억 원을 내는 포용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서 빌린 뒤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갚아 온 사람이 온라인 금융교육을 마치면, 정상 이자의 50%를 최대 12개월,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용덕 이사장은 신용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성실한 상환 노력이 금융생활 회복의 기반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번 호 세 번째 꼭지의 식스포인트처럼, 대출자의 실제 행동을 지원 기준으로 삼은 사례다.

출처: 더나은미래 (한국, 2026-11) — 사회연대은행·KB국민은행, 대부업 성실상환자에 이자 50% 지원

05 이번 호 전망

> 이번 호 전망 — 해외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B Corp' 이야기가 12월 말까지 국내 매체 2곳 이상에서 기사 2건 이상으로 다뤄진다 — 가능성 24% (판정: 2026-12-31까지 · 국내 매체 기사 제목 기준 2건·2곳, 2026년 11월 7일 이후 게재분)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는 첫 전망이다. 2주 전 '회사의 그릇을 다시 짜는 해'에서 비랩의 첫 글로벌 최고경영자를, 지난 호에서 일본 B 코프 100곳 돌파를 전했다.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늘고 있지만 국내 매체 제목에는 아직 거의 오르지 않았다. 가능성을 낮게 잡은 것도 그래서다. 맞든 틀리든 12월 말에 이 자리에서 결과를 적는다.

06 지난 전망 점검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은 지난 전망은 아직 없다. 위의 B 코프 전망이 첫 점검 대상이 된다.

07 편집장의 글

① 성명서의 시대가 끝나는 방식

2015년 영국 현대노예법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개가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했다. 기업이 공급망의 위험을 해마다 성명서로 공개하면 소비자와 투자자가 압력을 넣고, 그 압력이 공급망을 바꿀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1년 뒤 영국 정부는 그 체계가 "자발적 조치와 보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성명서는 쌓였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성명서 안에 없었다. 이번 주 영국이 택한 길은 공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시 위에 집행을 얹는 것이다.

규제기관이 상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면, 성명서는 비로소 그 기업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기록이 된다. 미국 세관이 멈춰 세운 3억 2,500만 달러어치 상품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공개는 출발점이고, 끝은 누군가 그 공개를 확인하고 결과를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이 변화에서 배울 것은, 지금 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언젠가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이다.

② 누구에게 묻느냐가 답을 정한다

식스포인트는 대출자 2,0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체자를 일부러 많이 표본에 넣었다. 그 결과 추심업체를 끊게 하고 숨은 수수료를 없애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갔다. 같은 주 영국 금융감독청은 ESG 평가기관에 등급을 매기기 전 기업에 알리고 기초 데이터를 보여 주라고 했다. 유럽연합은 기업의 녹색 주장을 미리 검증하는 체계를 접었다. 세 결정은 모두 같은 질문의 다른 답이다. 지속가능성의 성과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투자자에게, 평가기관에게, 기업 자신에게,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이 분야는 앞의 셋에게만 물었다. 고객과 수혜자에게 묻는 일은 '부드러운' 측정으로 취급됐다. 이번 주 SSIR 기고가 지적했듯, 세계은행의 빈곤 통계도 결국 사람들에게 물어서 만든다. 국내 지원 현장에서 사업 전후 비교값을 낸 조직이 213곳 중 12곳이라는 숫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수혜자 열 명에게 같은 질문 세 개를 던지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③ 재정이 빠듯해질 때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가

이번 주에는 여러 나라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영국은 공공 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로 좁혔고, 네덜란드 발주처들은 지속가능성보다 최저가를 더 자주 골랐으며, 유럽연합은 계류 법안 18건의 철회를 예고했다. 적응 재원은 1년에 10억 달러밖에 늘지 않았고, 열대우림 기금은 65개국의 지지와 8개국의 출자 사이에 서 있다. 재정이 빠듯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와 오래 걸리는 투자다.

그 흐름을 거스르는 곳도 있었다. 헬몬트시는 네 건의 발주 가운데 세 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필리핀은 생물다양성 목표의 필요액과 배정액을 숫자로 공개해 기술 지원을 얻었다. 둘의 공통점은 원칙을 선언하는 대신 장부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지난 호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안에서 보았듯,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도 법이 생긴 뒤 첫 재정 압박을 맞고 있다. 그 압박을 견디는 방법은 무엇이 사라지면 무엇을 잃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 임팩트 업계에 이번 주가 남긴 숙제는 하나로 모인다. 내가 내놓은 숫자를 누가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확인을 감당할 기록을 지금부터 갖추는 일이다.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년 11월 2주 · 전문가판